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제주 교육산업의 전망과 과제

김민호(제주대학교 교수)

1. 기획재정부의 교육산업 관련 계획

기획재정부는 2008년 4월 28일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 잡아 가는 상황에서, 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개선하고 서비스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 내용 중 교육산업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특히 ‘유학·연수’와 관련해 크게 다섯 개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08년 12월 말까지 이제껏 금지했던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초·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수의 30%로 확대한다.

둘째,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외국인 학교의 설립주체를 국내 법인으로 확대하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해외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며, 현재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라 할지라도 국어와 국사 등 일부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해 준다.

셋째, 원어민 교사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08년 6월 말까지 원어민 보조교사의 학력 자격을 완화하고, 2008년 12월 말까지는 체류자격(E-2비자) 기준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확대한다.

넷째, 학교에서 영어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제주에 설립 예정인 영어교육센터와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한 대학등을 영어교사 연수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TEE : Teaching English in English) 교사제’를 2008년 12월 말까지 도입한다. 또 2008년 7월



말까지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수업 시간을 확대한다.

다섯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2013년 2월까지 서귀포시에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하는 정주형 영어교육 도시를 조성하고, 영어전용학교 12개 교를 설립해 연간 9천명을 교육한다. 우선 2010년 3월에 1단계 시범학교를 개교한다. 또 2010년 2월까지 영어교육센터를 설립해 영어교육과정 개발과 영어교사 및 성인 연수를 담당하게 한다.

2. 교육산업의 개념 검토

우리는 종종 ‘교육산업’을 ‘사교육 산업’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산업(industry) 및 기업(enterprise)에 관한 개념 정의¹⁾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산업’을 ‘사기업’(private enterprise) 활동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보다 상위 개념이다. 산업 중에는 영리 목적의 사기업의 산업 활동은 물론 비영리 공기업(public enterprise)에 의한 산업(예, 전력산업, 철도산업 등),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의한 산업 활동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산업을 논의할 때, 사기업만이 아니라 공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구해야 한다.

3. 영리성 교육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영리성 교육산업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처럼 교육산업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교육의 본질 왜곡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종속에 이르기까지 교육산업의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교육산업 활성화의 찬반 양론을 살펴보았다.

가. 영리성 교육산업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

첫째, 경제적 이유에서 교육산업 활성화를 주장한다. 즉 국내 교육산업의 활성화가 (조기)유학 및 연수에서 비롯하는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한다고 본다. 또 교육산업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둘째, 교육산업 활성화의 근거로 사회적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외 자본을 막론한 양질의 외국인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는 세계화에 따른 개방과 교류의 확대 속에서 국민들의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 습득을 강조한다.

셋째, 교육산업 활성화의 이유를 교육의 질 개

1)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에서 ‘산업(industry)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사람이 생활하기 위하여 하는 일.” 혹은 “재화, 용역, 소득의 원천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의 모임” 등으로 정의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서비스나 무형의 이익을 공급하고,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지 않지만 부(富)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한편 ‘기업’(enterprise)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일, 또는 그 사업”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 또는 그 활동”으로 정의된다. 공기업은 “주체와 목적 및 수익성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고, 사기업은 “민간의 자본을 출자해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인에 의해 영위되는 일체의 개별경제”를 가리킨다.

또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비영리조직(NGO)과 사기업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 일반 회사처럼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에 있으며,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고, 의사결정도 주주이외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조직이다.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노동부 <http://www.socialenterprise.go.kr>).



선 및 교육의 다양화에서 찾는 경우다. 이들은 현 국내 교육시스템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외국 대학을 비롯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개방은 국내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 충족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나. 영리성 교육산업의 확산을 우려하는 시각

이들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영리 산업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교육을 영리 산업의 논리로 접근할 때 빚어질 부정적 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이들은 영리성 교육산업이 가져올 비(非)교육적 결과를 든다. 즉 교육산업화 추진 결과, 교육의 외양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 확산으로 교육의 본질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한다. 또 교육의 산업화 과정에서 모듈 단위의 교육상품 개발 및 적용으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인격의 통합과 같은 교육의 총체적 성격을 상실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둘째, 이들은 영리성 교육산업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 결과를 지적한다. 즉 교육 민영화에 따른 계층간, 지역간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확대 특히, 교육소외집단에게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공공성 중심의 교육정책의 약화를 우려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산 속에 지역문화의 정체성 상실 가능성을 제기한다.

셋째, 이들은 영리성 교육산업이 경제적 문제를 초래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즉 중앙의 대규모 독점자본에 의한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지역의 소규모 영세 자본이 운영하는 교육기업을 잠

식할 우려가 있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본이 교육산업을 통해 축적한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문제 삼는다. 무엇보다 지역의 교육산업과 교육산업을 이끌 인재육성이 지역단위에서 선순환 구조를 지니지 못할 경우, 지방이 중앙 인력에 의존하는 인적자원의 종속이 예상된다.

사실 자본의 관점에서만 보면 교육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교육산업에 적합한 유능한 기술(technology)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할 따름이다. 지역의 인재 양성, 혹은 인간자본, 인적자원(human capital) 개발은 이차적인 문제이다. 교육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력만 있다면 외국에서 도입할 수 있고, 값싸게 도외의 기존의 관련 분야 유경험자를 확보해도 나무랄 수 없다. 도내 젊은이들을 신규 인력으로 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자본가의 초점은 지역 인재 양성이 아니라 산업 자체의 증진, 이윤 확대이기 때문이다. 곧 어느 지역 어떤 분야의 산업의 증진이 그 산업이 자리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일자리를 지역주민이 채운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산업 육성이 지역 인재 양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 않는다.

4. 제주 교육산업의 전망²⁾

제주에서 교육산업, 특히 목하 주목 대상인 영리성 내지 준영리성 교육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산업 개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즉 영리성 내지 준영리성 교육산업을 제주 전략산업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

2) 이하의 내용은 제주지역혁신연구회(2005.7.19, 제주대학교) 및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제주특별위원회(2005.9.2 제주KAL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교육산업 육성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이 글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음.



가. 제주 교육산업의 타당성

필자는 다음의 전제조건 모두를 충족시킨다면, 아니 적어도 하나라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영리성 교육산업을 유치,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도민 주체 개발의 원칙으로서 영리성 교육산업을 우선 제주도민 내지 제주지역 교육자본이 추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제적 이득의 지역사회 환원이다. 설령 제주 지역 자본이 아닐지라도, 외부 자본이 교육산업을 추진한 결과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면, 차선이나마 제주 교육산업 추진에 동의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나아가 제주지역 인재양성³⁾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사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길이다. 특히 민간자본 중심의 교육산업의 활성화가 제주지역의 공교육의 교육적 토대를 붕괴시키지 않고, 공교육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해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의 본질 훼손 방지, 최소한의 교육의 공공성 유지 및 교육양극화 완화, 환경보전 및 지역 문화의 정체성 유지 등을 확보하는 일이다.

나. 제주 교육산업의 실현 가능성

제주 교육산업의 실현 가능성은 교육분야와 교육성격에 따라 다르다.

교육의 분야 / 교육의 성격	공교육		사교육	
	비영리성	준영리성	준영리성	영리성
유아 및 초등교육		2	2	1
중등교육		2	2	1
고등교육		2	2	1
학교 밖 평생교육		3	3	3

■ 영리성 및 준영리성 교육산업

* 교육의 분야 : 유아 및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교 밖 평생교육

* 교육의 성격

▶ 교육의 관리 주체에 따라

- 공교육 :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 사교육 :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관리

▶ 설립 목적의 영리성 정도에 따라

- 영리성 교육 : 설립 목적이 영리 추구(사설학원, 영리 학교법인 등)
- 준영리성교육 : 설립 목적이 영리에 있지는 않으나, 부수적으로 영리 추구(비영리성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고등학교, 영어교육도시내 교육기관, 제주형 자율학교, 공영형 기숙학교, 방과후학교, 방학중 캠프 등)

3) 지역인재 양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교육산업만이 아니라 제주지역의 다양한 산업분야(농업, 수산업 등 낙후산업조차 포함)에서 활동할 인력을 육성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산업과의 연관성보다는 폭넓은 기초능력 개발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즉 협의의 인재양성이 아닌 광의의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협의의 인재양성에서는 직업능력 개발 또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공급, 주로 경제발전, 고용창출 및 실업예방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적·기업적 차원의 교육훈련 범위를 뛰어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기초능력, 정보활용력, 민주시민역량 등 인간의 품성에 관한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인재양성이 요구된다. 예컨대 OECD, World Bank 등은 인적자원을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나누고 이들의 결합을 강조하는 광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 인성 및 도덕적 성숙, 사회적 신뢰 등의 관계가 공고해져야만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가치가 제고됨은 물론 사회적으로 가용 가능한 인적자원의 총량이 극대화되며, 국제적으로는 각종 물질·인적 자본 유치 및 부가가치 창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영리성교육 : 설립 목적이 영리성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공공성을 추구(국·공립학교)

1) 영리성 초·중·고등교육기관

2008년 12월 말까지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이 허용될 예정이어서 영리성 외국교육기관의 제주 유치에 제도적으로 보장될 예정이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30%로 확대할 것이기에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제주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성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제주지역이 얼마나 영리성 외국교육기관 유체에 경쟁력을 지닐지는 미지수다.

2) 준영리성 유아·초·중등교육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을 유치하고 부수적으로 이들 가족을 특정 지역으로 유입해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다. 비영리 외국 학교법인, 외국인 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장차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설 국제고등학교 및 영어 몰입형 교육기관, 또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학교가 방과 후 교육까지도 전적으로 책임 관리하는 공영형 기숙형 학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영리성 외국대학이나 외국인학교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으나 2009년 3월 서귀포에 개교 예정인 핀란드의 한 대학 분교를 제외하곤 전무하다. 제주형 자율학교, 영어교육도시에 세워질 국제고등학교, 여타 초·중등학교 등은 영어 몰입교육 형태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이를 담당할 유능한 교사 인력 확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힘입은 적정한 수업료 책정 등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영리성 및 준영리성 학교 밖 평생교육기관

학교 밖의 평생교육 영역에서 영리성을 추구하는 사설학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이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는 이제껏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제주지역 교육산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이 분야에 찾아보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진학 또는 취업 희망자 대상의 사설학원, 교육유급휴가를 받은 직장인 대상의 각종 사설학원 및 연수 위탁산업, 혹은 공공기관, 종교기관, 기업체 및 노동조합 등이 직접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5. 제주 교육산업의 대안 모색

현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없는 비영리성 공교육 산업과 제주지역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영리성 사교육을 제외하고, 준영리성 학교교육과 영리 및 준영리성 평생교육 산업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가. 준영리성 유아·초·중등교육기관

영어교육도시에 조기 유학을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조기 유학의 사전 준비, 혹은 조기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미국식 학기제와 일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공영 혹은 사립의 초, 중학교 설립을 검토한다.

첫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간 여러 형태의 영어몰입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둘째, 여름방학 중 유자격의 원어민 교사, 제주지역 관련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향토교육 경험이 있는 역량 있는 교사를 통해 유료의 다양한 캠프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 여름방학이 5월



중순부터 8월까지인 미국식 학기제 학교를 설립하고, 방학 중 특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예컨대 다음의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원어민 영어 캠프(방학 중 보수가 없는 다수의 미국인 유자격 교사 유치, 특히 한국계 미국인 교사의 임시 채용 및 활용 가능) ② 제주지역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과학체험 교실, 레저 스포츠 교실 운영(화산지형의 오름, 동굴 및 해안체험, 한라산 식물대 및 한국의 야생화 공부, 골프 및 해양 스포츠 교실 운영 등) ③ 전원 기숙사 생활(대략 2개월 반 정도) ④ 학기 불일치 학생들의 경우, 해당학교에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한다.

셋째, 대학 입시 부담이 없는 초등학교 5,6학년이나 중학교 때, 1년 혹은 1학기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영어권 국가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자매결연 학교 상호간 교환학생 제도 도입 실시한다(미국학교 수학, 미국인 가정 홈스테이,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학생과 교류 기회 제공).

나. 영리성 및 준영리성 평생교육 산업

교육은 인간, 사회 및 자연의 범주 속에서 그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삶의 세계		교육의 영역
인간	육체	건강 및 장수 교육
	정신	문화교육, 예술교육
	영혼	영성교육
사회		역사교육, 평화교육
자연		과학교육, 생태환경교육

위 구분에 따라 제주의 청정한 자연 환경, 독특한 역사와 문화 등을 활용해 제주 혹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자연을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제주 관광과 연계한 영리성 및 준영리성 평생교

육 산업을 개발한다.

첫째, 건강하고 장수하는 제주인의 삶의 모습, 생활양식에 비추어 ‘건강 및 장수교육 산업’을 개발한다. 특히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과 이에 적응해 온 제주인의 노동하는 삶, 검소한 삶, 함께 하는 삶의 방식에 비추어 건강 및 장수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매체, 체험 관광 프로그램 속에서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탐라문화 및 예술 교육 산업’을 개발한다. 주5일 근무제 등 여가의 증대 속에서 이(異)문화 체험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육지와 독특하게 다른 제주의 문화와 예술, 곧 탐라문화 및 예술을 단지 교과서적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제주인의 일상생활 재현촌(村)에 참가해 제주의 전통 농업, 어업, 관혼상례, 음식 및 주거 생활 그리고 제주의 민요와 춤 등을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한다. 단지 관람하는 관광이 아니라 테마가 있는 제주학습기행으로 전환한다.

셋째, ‘제주 역사 기행 산업’ ‘평화교육 산업’을 개발한다. 제주 특유의 역사, 특히 4·3과 같은 반(反)평화적 사건, 이재수난과 같은 반의세 투쟁 사건 및 조선시대 관리나 죄수들의 제주 유배 등을 역사재현촌(村)에 참가해 체험함으로써 제주인의 한 많은 삶을 이해하고, 일제시대 전적지 탐사 등을 통해 평화에 대한 자각을 일깨운다.

넷째, ‘제주생태환경 교육 산업’, ‘친환경 유기농 교육 산업’을 개발한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의 한라산을 비롯해 오름, 바다(해안과 바닷속), 섬 등 제주 지역 생태환경에 대해 단지 교과서적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학습을 통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제주의 청정 환경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이 토대 위에 제주에 특유한 친환경 유



기농 관련 지식과 기술 및 삶의 자세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생태학습장을 마련한다.

다섯째, 대자연과 하느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영성교육 산업’을 개발한다. 이시돌 목장 내 ‘이시돌회관’과 ‘줍음의 집’이 천주교 신앙을 토대로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육지의 많은 순례객들에게 대자연과 하느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이같은 사례에 비추어 천주교는 물론 개신교, 불교 등 제주도내 여러 종교기관에서 제주도민과 육지 순례객들에게 편안한 쉼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는 영성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6. 첨언

제주 교육산업이 발전하려면, 해당 산업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양성교육과 재교육이 요구된다. 모든 산업의 발전은 해당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인재를 스스로 키우지 못하고

외부에서 꾸어 온다면 당장에는 해당 산업 개발에 따른 단기적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결코 영리를 확보할 수 없다. 앞서 제시한 영리성 및 준영리성 평생교육 산업과 준영리성 유아·초·중등교육의 개발 역시 해당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산업은 영리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보다는 주된 교육수요자인 외부인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로 귀결하기 쉽다. 이는 편향된 지역개발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산업의 육성과 함께 제주도내 공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인재를 기르는 일 역시 소홀히 한다면,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 출발했던 교육산업의 개발 역시 결코 제주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외지 교육자본에 이용만 당하고 말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